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추진”

與 K-자본시장특위 당정협의
거래소 저PBR 기업 공표제도 점검
상속·증여세법 개편 방안 등 논의

자본시장에서 ‘저(低)PBR(주가순자산 비율)’ 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29일 정부의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 주기) 시행을 점검하고 베어허그제도 도입, 상속·증여세법 개편,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위,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실무당정협의의를 열고 주가누르기 상종세법 개편 방안,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추진 경과 및 자본시장법 입법 과제 등을 논의했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한다”며 “정책 기조 속에서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계속 확보해나가는 것과, 기관·장기투자자와 경영진의 소통을 강화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일관되게 개선해 나가고 필요한 것들은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이야기하는 저PBR 기업들이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되게 많다”며 “60~70% 정도가 PBR가 1 이하인데, 그런 기업들의 저PBR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PBR는 시가총액을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인데, PBR가 1 미만인 경우 기업을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낮다는 뜻이다. 자본

시장에선 한국의 고질적인 저PBR 현상이 부족한 주주환원,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될 결과라고 지적하며 상속·증여법 개편을 통한 주가누르기 방지가 필요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위는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2일부터 PBR가 낮은 상장사를 공표한 이후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 제도를 점검하고, 한국형 베어허그제도 입법을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오 위원장은 “저PBR 기업들은 장부 자체가 정상이라면, PBR가 0.2, 0.3인 기업들은 인수합병(M&A) 대상”이라며 “자본시장의 기능으로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저



베어허그 제도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은 상장사의 이사회가 해당 제안 내용과 검토 계획을 일반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공개매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강제하는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과 국민의 자산을 충실히 관리하도록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자율 지침.

PBR 현상이 해소되는 것이 베어허그 제도다. 매수에 대한 것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공시 내용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가 판단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의 빠른 입법을 위해 당 내를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두고 “이를 통해 기관·장기 투자자들이 경영진과 소통을 하면서 저PBR 현상을 해소하고 자본의 효율적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논쟁을 계속하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약간의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행의 개선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에 필요한 자본시장법상 ‘5%를(상장사 주식 5% 이상 보유·지분 변동 시 의무 공시제도)’ 개

선, 공동보유자의 제도 개선 여부는 계속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것”이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행평가를 하지는 것”이라며 “올해 말에 기관 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하고 이를 내년에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게 자산운용을 위탁하는데, 이때 잘 안한 기업은 (비율을) 줄이고, 잘하는 기업들은 늘려서 스튜어드십 활동을 활성화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이 5~8%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표대결이나 승부에서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지 어렵다”며 “다른 나라의 기관은 투자자들도 같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는 공동 의결권 행사가 법적으로 사전에 공시하지 않고 행사할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제도 개혁을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법 개편을 두근 “정부안과 여러 의원안이 같이 있어서 대안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재정 우려... 당정 “보완책 마련”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與 “내년 예산안에 지역 특수성 반영”
지자체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선 안 된다”는 지역의 우려를 짚었고,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앞줄 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와 당정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청년, 미래 성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가속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급격한 재정 수입의 변동성으로부터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정의 안전판 기능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다”며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 미래대응기금의 완

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정부에 재원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연이어 줄어들었다”며 “지방정부는 이를 미리 알지 못한 채, 반영하지 못한 채 한해 한해의 살림을 다시 쥐어 짜야 했다”고 말했다.

이울러 “반면 복지, 돌봄, 노동 등 지방이 책임져야 할 일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

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설계와 활용 방안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설계로 인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예측치에 비해 축소되는 점에 대해 지방정부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며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장동혁, 백령도 찾아 “장병 안전, 국가 책무”

국민의힘 대표, 여건 개선 약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북도서 최전방인 백령도를 방문해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우리 장병들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헬기로 백령도에 도착해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하고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했다. 이후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908 관측소(OP)와 포병대대를 차례로 방문해 작전 준비 상황과 주요 장비를 점검했다.

장 대표는 장병들과 오찬에서 “대한민국의 최일선에서 적과 마주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 여러분을 보니 든든하다”며 “우리 장병들이 예우받으면서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앞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한 것을 언급하며 “천안함 파격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도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뢰 폭발 사고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장병들이 자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장병) 여러분을 믿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격려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상황을 볼 때 국민이 믿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병 한 분 한 분”이라며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국민이 믿고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방어진”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수 기자

李 “DMZ 사고 철저히 조사… 음모론 경계”

“안보에 여야 따로 없어”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 조사를 주문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당국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사진)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 서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면서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

첨단화에 더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며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차원을 넘어, 싸울 필요 자체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 22일 공군에 인도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자주국방의 핵심 성과로 꼽았다. /서예진 기자 syj@